

장기 방치차량 처리, 적극 행정 기대한다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5.21 18:51

제주종합경기장 주변은 각종 행사로 인해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공항 이용자나 레저 동호인 등의 장기 주차로 무질서가 심각했지만 지난해 11월 종합경기장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면서 이 같은 문제는 곧바로 해소됐다. 그러나 그 후에도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은 흉물로 남았는데, 제주시가 최근의 견인조치에 이어 강제 처리 절차에 나선다. 이제 마무리 단계다.

제주시는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자진 처리 통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 15대에 대해 자동차 처리명령서를 발부한다고 그제(20일) 밝혔다.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강제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강제처리는 곧 '직권 폐차'로, 이후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앞서 제주시는 수차례 독촉에도 꿈쩍 않던 16대를 지난 달 강제 견인했다.

제주시의 이 같은 적극적인 조치에 시민들은 환영 일색이다. 제주는 대한민국 최고 관광지다. 장기 방치 차량들은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부분 녹슬고 쓰레기더미로 가득 차 있어 도심 흉물이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위험을 느끼기도 한다. 그렇잖아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운전자들의 화를 돋우기 십상이다.

제주 곳곳에서 방치된 차량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제주시는 제주종합경기장 주차장에 앞서 지난해 공영주차장 내 1년 이상 방치 차량을 대상으로 견인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런 가운데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강제처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제주종합경기장 주차장 등에서 보여줬던 적극 행정이 이제 더 요구된다. 행정당국의 의지와 준비 여부에 따라 제주의 주차장을 밝게 하는 시기가 결정된다.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협조를 구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관광지답게 미관과 도민의 편익 모두를 챙기는 일이다.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제주일보